

요약

‘생활임금 민간재단’ 만들어 제도 민간확산 주도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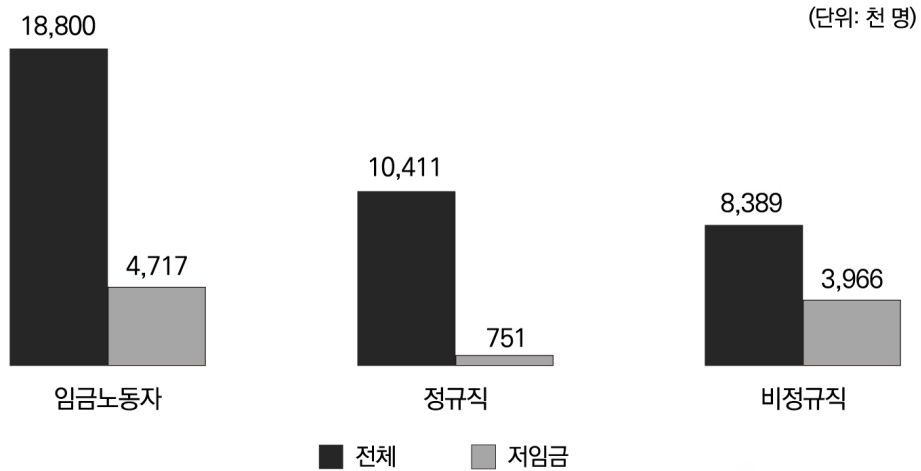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중심 급속확산... 50여 지자체 도입예정·시행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3년에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국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 해 부천시도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어 서울특별시도 2015년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각 지자체로 생활임금제가 확산되어 2015년 12월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가 50여 개에 이른다. 현재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이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 결과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른 수혜 대상은 공공부문의 본청·투자·출연기관 등의 일부 종사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산 땀 저임금노동자 상당수 혜택 받을 듯

생활임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이다. 이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민간부문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1,880만 명 가운데 25.1%인 472만 명이 저임금노동자로 분류된다. 생활임금제 적용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 급여수준을 올려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397만 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활임금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취약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생활임금제가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방향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료: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그림 1] 국내 임금노동자 현황

런던시, 민간확산 대표적 성공사례... 생활임금재단이 중추적 역할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는 영국이다. 특히 런던은 시청을 비롯한 생활임금재단,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런던시청은 본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단체, 생활임금재단 등과 협력하여 제도의 민간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런던시장은 매년 11월 개최하는 생활임금주간(Living Wage Week) 기간 중 차년도 생활임금액을 직접 발표하고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 업체들에게 생활임금 도입을 권유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인 런던시청이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런던시청을 대신하여 전면에 나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생활임금재단이다. 생활임금

재단은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생활임금 지급을 약속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 인증마크 부여, 생활임금 인증 사업체 대상 생활임금 도입 가이드 제공, 성공적인 운영사례 공유, 법적 조언 등 각종 지원과 자문서비스, 생활임금 홍보를 위한 포럼 운영, 매년 11월 첫째 주 생활임금주간 행사 개최 등이 있다.



[그림 2] 영국 생활임금재단 로고

서울시, 민간위탁·용역 등 간접고용 분야에도 제도 확대적용 계획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 방안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공부문에서의 전면적인 생활임금제 도입이다. 현재 서울시는 본청·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추후 민간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분야로도 생활임금제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생활임금제를 완전하게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부문에 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이 생활임금제를 완벽하게 도입한 상태에서 민간부문에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분야로의 제도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활임금제 성공하려면 지자체장의 관심·의지·적극 활동이 필수적

생활임금제의 도입 활성화, 조기 정착을 비롯하여 민간확산을 위한 지자체장의 관심·의지와 적극적인 활동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런던시장은 매년 차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직접 발표하는데, 이는 정책적 신뢰 획득과 함께 제도 실행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자체장이 직접 생활임금액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장이 생활임금액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제도 확산과 관련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Penrose Care(2015)

[그림 3] 2015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는 런던시장

민간부문 중 공공성 강한 대상 발굴 후 MOU 맺어 제도도입 권유

2015년 10월 서울시·시의회·자치구·교육청은 생활임금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확산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생활임금 업무협약은 외연적으로 생활임금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 산하 지자체들 다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 교육청도 2016년 2학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 업무협약의 성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서울시 단독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협약 방식을 생활임금 민간확산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 중에서도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비영리재단 등 공공성이 강한 대상을 발굴한 후 업무협약을 통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권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 성북구는 관내 소재 대학인 한성대·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림 4] 2010년 런던 소재 7개 대학이 생활임금 도입을 발표하는 모습

공공한계 극복하고 민간확산 이끌 핵심주체로 ‘민간재단’ 설립 필요

서울시와 같은 공공부문이 전면에 나서서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주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민간확산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생활임금민간재단(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생활임금민간재단은 생활임금제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실행을 담당하며, 지자체(서울시),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임금 관련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은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사업의 주도적 시행 기구로서 생활임금제 인증제도 운영, 정보구축,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주체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